비상경제장관회의
23-1-2
(공개)

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

2023. 1. 4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Ⅰ. 추진배경 1

Ⅱ.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2

Ⅲ. 중점 집행관리 분야 3

Ⅳ. 재정집행 관리방안 4

Ⅰ. 추진배경

◈ **거시경제 안정**과 **서민·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**를 위해 재정을 **상반기에 속도감있게 집행**할 필요

□ 상저하고(上低下高) 전망 → 상반기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중요

○ **전세계적 경기 위축, 국내금리 상승 영향** 등이 **수출·내수** 등 우리 경제의 **성장세**를 **제약**할 전망

* 경제부문별 전망('23년 경제정책방향, 전년비<'22년→'23년>)
: 민간소비(+4.6%→+2.5%), 설비투자(△1.8%→△2.8%), 수출(+6.6%→△4.5%)

-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**성장경로 회복이 기대**되는 **하반기**와 달리, **상반기**에는 **민생·수출** 등을 중심으로 **어려움 가중 예상**

○ 그동안 **재정**은 **경제성장과 복지제도의 확충**을 뒷받침하면서도, **경제위기시 안전판**으로의 **역할을 충실히 수행**

- 금융·외환시장의 **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**하여 국민경제가 **안정적 성장**을 이어올 수 있도록 기여

□ 적극적인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

○ 금년 상반기 급격한 경기하락 가능성에 대응하여 **민간 부문의 활력을 지원**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절실

- 중앙재정 뿐만 아니라,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도 **신속한 재정투입 노력**을 통해 **경기 대응 역량 집중**

○ 취업자 증가폭 축소* 등 고용여건 악화, 높은 물가수준 지속에 따른 **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응**할 필요

* 취업자 수 장기추세 복귀에 따른 기저효과, 경기둔화 및 인구충격 등이 중첩

- **일자리** 및 **민생·물가안정**에 기여하는 재정 사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**미시적 집행관리도 긴요**

Ⅱ.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

◈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설정·관리

※ 신속집행 대상규모는 '22년도 이월 등을 반영, '23.2월 세입·세출 마감 후 확정

1 신속집행 관리대상

○ **중앙재정**과 **지방재정·지방교육재정**의 인건비·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중 **재량지출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대상 선정**

⇨ **총 482.5조원***의 **신속집행관리 추진**

* 중앙재정 240조원 + 지방재정 217.1조원 + 지방교육재정 25.4조원

2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

○ **상반기** 중 **집약적**이고 **속도감 있는 재정투입**을 위해 **재정별**로 적극적·공격적인 **상반기 집행목표 수립**(중앙재정 65%)

※ 비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 집행관리 노력을 통해 총지출 638.7조원 중 **60%이상**(383.2조원)을 **상반기에 집행 추진**

'23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

(단위 : 조원, %)

구 분	2023년(잠정)		
	연간 계획	상반기 계획	
		금액	집행률
중 앙 재 정	240.0	156.0	**65.0**
지 방 재 정	217.1	131.3	**60.5**
지방교육재정	25.4	16.5	**65.0**

재정별 신속집행 목표 추이(집행률, %)

Ⅲ. 중점 집행관리 분야

◈ **사회적 약자 및 민생 어려움 경감을 위한 주요사업 선별·밀착 관리**

< 중점 집행관리 분야 >	< 중점관리 대상 >	< 관리 규모 >
일자리 사업	▸ 일자리 사업(145개 사업)	14.9조원
	※ 직접 일자리(29개 사업) 사업	104.4만명
민생·물가안정 사업	▸ 민생안정 사업(36개사업)	11.2조원
	▸ 물가안정 사업(45개사업)	5.4조원

1 일자리 사업

○ (대상사업) 24개 부처의 181개 사업, 30.3조원 규모

*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(13.4조원), 고용장려금(5.1조원), 직업훈련(2.7조원) 등

○ (집행목표) 관리대상 사업예산*(14.9조원) 중 상반기 70%(10.4조원) 이상 집행

*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(30.3조원) 중 관리실익이 없는 일부 사업 제외

※ (직접일자리)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직접일자리(연간 104.4만명) 중 상반기 90%(94만명) 이상 조기채용 추진

* '23년 직접일자리 합동지침 '22년 12월 신속 배포 등 사전절차 진행

○ (관리방향) 상반기 최대한 빠른 집행 및 채용을 독려하고 매월 주기적 실적 점검 및 애로요인 파악·해소 등 밀착 대응

2 민생·물가안정 사업

○ (대상사업) ①**(민생안정)** 12개 부처 36개 사업, 11.2조원

*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(2.8조원), 서민 생계부담 경감(7.0조원) 등

②**(물가안정)** 8개 부처 45개 사업, 5.4조원

* 수급관리 안정지원(3.9조원), 식량안보 강화(0.7조원) 등

○ (관리방향) 맞춤형 사업관리를 통해 적기 사업성과 창출

- 물가안정사업은 품목별 수급상황, 명절·김장철 등 수요 집중시기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예산 적기 집행

Ⅳ. 재정집행 관리방안

1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의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조속 이행

○ **(예산·자금배정) '23년 상반기 중** 역대 최대수준(75%)의 **예산배정계획을 확정**('22.12.27)하여 **재정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**

* '23년 1분기 269.5조원 예산 정기배정('23.1.1.), '23년 정기자금 배정(1.9.예정)

○ **(사업계획 확정)** 총액계상사업, 수시배정사업 등은 사업계획 확정 후 **즉시 착수**

2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

○ **(밀착 관리) 관계부처 합동**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실무회의를 **정기적으로 개최***하여 **집행점검 플랫폼으로 활용**

* 월 1회 개최 원칙, 필요시 수시 개최

- **집행애로 해소**를 위해 **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**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간 **효과적인 협의의 장**으로 활용

○ **(집행관리 유인 제고)** 집행관리 우수 **지자체 및 중앙부처 대상** 재정지원 인센티브*·포상 추진

* 예산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지원규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근거 명시(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)

3 재정 신속집행과 함께 집행성과 도출 및 문제해결에 집중

○ 사업 수혜자 등에게 귀속되는 **실집행을 기준***으로 **집행성과 점검**

* 집행액과 실집행액 괴리시 집행 전달체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, 실집행 수준을 고려하여 추후 예산편성 과정에 참고

○ **집행애로 사항 해소**를 위해 재정당국 협조요청, 관계부처 간 협의 중재 등을 통한 **문제해결에 초점**을 두고 **집행관리**